

자유 개념에 대한 혼란과 교훈

Origin of the confusion about liberty and its lesson

장대홍 한림대학교 명예교수(dt.jaang@hallym.ac.kr)

자유주의는 개인의 영역과 자유는 보호해야 할, 또는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음에서 나왔고, 개인이나 사회의 힘이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막아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개인적,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자유의 개념(liberty or freedom in negative sense)’ 에 바탕을 둔다.¹ 이런 근대적 자유주의 사상은, 17, 18세기 이후부터 유럽 일부에서 발달한 이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인신보호, 종교적 선택의 자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의 지배, 시장경제와 같은 파생 개념이나 제도들을 낳았고, 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한 사회에게 커다란 번영을 가져다 주었음은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순탄한 길로 확산되지 않았고, 반자유 이념들의 위협과 도전에 시달려 온 것도 사실이다. 극단적 반자유주의 이념인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패퇴하였지만, 반자유 체제나 반자유주의 성향은 세계도처에 남아있고, 여전히 만만치 않은 힘을 과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도 정부 역할의 확대 추세는 개인의 영역이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유주의의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주의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자극하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임

¹ 하이에크는 진정한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 를 의미함을 분명히 하였고(Hayek, F.A., ‘The constitution of liberty’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9, 베를린(Isaiah Berlin)의 정의와도 일치한다(Berlin, I., ‘Two concepts of liberty in Four Essays on liberty’ ,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이 개념의 성격은 베를린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아래에서 논의하는 ‘적극적 자유’ 대비해보면 보다 분명해 진다.

생각해보면, 반자유 성향의 지속적인 영향력은 이해하기 어렵기까지 하다. 반자유주의 성향의 원천은 무엇이며, 또 그것이 수그러 들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소극적 자유에 대한 오해 또는 개념적 혼란에서 나온다. 소극적 자유는 본질적으로 ‘...의 강제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coercion of ...)’를 의미하지만, 강제의 범위나 성격, 예를 들어 누가 어떤 강제력을 행사함을 뜻하는지, 또는 그것이 직접적인지 숨은 방식으로 행사되는지를, 또한 강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명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학교나 교회 앞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려는 행위를 허용해야 할 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감추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단체의 선동을 언론과 결사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 지, 어떤 방식으로 제재해야 할지와 같은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자유주의는 속시원하게 확실적인 정답을 제시하는 대신 개인의 자유영역을 한껏 보호해야 하며, 자유침해 행위는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할 뿐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고도의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 판단을 통한,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진화해 나갈 수도 있는, 사회적 합의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자유주의가 오직 개인만이 가치판단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이런 소극적 원칙이 자유주의 장점임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력이 가져오는 사회적 과실을 거둘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가 성공하려면 사회의 문명수준이 성숙해야 한다는 견해는 이런 인식에서 나왔다.

자유를 수동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보는 또 다른 해석은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적 혼란과 도전의 근원이다. 그것은 자유를 행사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즉 ‘...에 대한 자유(liberty to...)’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개인의 자유 또는 개인적 영역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라면, 그것은, 적어도 극단적으로, 개인적 차이를 낼 수 없다. 부유한 재벌가의 딸이 갖는 자유가 극빈 가정의 아들이 갖는 자유의 차이를 두고 보편적 자유를 말할 수 있는가? 진정한 자유는, 현실적으로 제한된 개인 영역 또는 자유에서 독립되어, 보편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정의되는 ‘적극적 자유(freedom in positive

sense)' ²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되는 자유의 개념이다. 적극적 자유의 이념은, 주체적(master of myself)이며 우월적인 이성(superior rationality)에 기초해야 할 것임을 주문하지만, 흔히 특정집단, 교회, 사회, 민족, 또는 국가의 이상으로 포장되며, 평등지향적, 사회주의적 성향을 띄게 되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원래의 자유주의의 이념인 소극적 자유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인신보호, 종교적 선택의 자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의 지배, 시장 경제와 같은 개념이나 제도들을 낳았다. 반자유 성향은 이들 개념들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도전하거나 회의를 갖는다. 그것은 주로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영역이나 역할에 대한 인식의 혼란 때문이고, 그 근원은 위에서 살펴본 두 자유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나온다. 두 자유주의 개념의 성격과 공과를 논증하는 일은 쉽지 않고,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그렇지만 이 과제를 위해 그들 개념이 발전해온 궤적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는 일은 도움이 될 터이다.

두 자유개념이 최초로 정치사회 체제에, 대조되는 방식으로, 구현된 역사적 사건은 18세기 후반에 연이어 일어난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이었다. 미국 건국의 주역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 혈통의 시민들이었고, 존록크, 몽테스큐의 자유주의 정신, 스코트랜드 계몽주의 사상에 정통한 엘리트들³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유의 이상과 책임, 힘을 사용하되 억제할 필요성을 잘 이해한 자유주의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력에 의존해야만 반자유적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영국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주장한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최강의 영국군대와 싸우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자유주의적 애국자들 이었고, 결국 힘겨운 투쟁 끝에 미국이라는 최초의 자유주의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건국 후에도 미국은 삼권분립과 자유선거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치체제, 자유주의 정신을 존중한 헌법제정, 시민의 권리를 명시한 권리장전을 차례로 발전시켰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시민에게

² 이 개념은 베를린의 정의에서 나왔다(Berlin, I., 'Two concepts of liberty 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³ 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은 모두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계몽주의 사상에 정통한 지식인들 이었고, 이들의 포함한 건국의 주역들은 대부분이, 제퍼슨의 이상주의를 제외하면, 현실주의적 성향을 가진 자유주의자들이자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독선적 이념을 강요하거나 시민적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는 전통을 확립해 나갔다.

뒤이어 발생한 프랑스 혁명은, 미국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반자유적 절대왕조체제를 청산하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적극적 자유주의 정신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정치사회 개혁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구체제에 대한 반감과 이성주의적 성향이 강한 지식층⁴이 주도한 혁명은 무모한 정치실험, 무절제하고 반자유적인 폭력으로 엄청난 인명과 자산을 파괴하는 후유증을 남기고 끝났다. 이후의 정치상황도 공화정, 제정, 왕정복귀, 공화정 체제가 반복되는 혼란을 겪다가, 백여 년이 지나서야 오늘날의 공화국 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프랑스혁명 정신의 바탕이 된 적극적 자유의 개념은 오늘날의 복지국가나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반자유적, 사회주의적 이념들이라는 변종을 만들어 내었다. 과시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사회주의, 민중주의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⁵ 이들 이념의 공통점은 소극적, 개인주의적 자유보다는 적극적, 사회적 자유를 강조하고, 같은 어원인 라틴어의 ‘libre’에서 나왔지만, ‘자유(free or liberal)’와는 다른 개념인 ‘해방(liberate)’을 즐겨 사용한다. 현대 보수주의 이념의 원조로 인정받는 에드먼드 버크는 진정한 자유주의자였으며, 이들 두 자유 개념의 차이를 잘 이해했던 까닭에, 미국혁명을 열렬히 지지한 반면, 프랑스혁명에 대해서는 신랄히 비난한 걸로 유명하다.

적극적 자유의 이념은 (원래의) 자유주의적 특질을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다른 경로를 밟아, 도입되었다. 잦은 경기불황과 빈부격차의 확대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정부의 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극복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대두시켰고, ‘뉴딜’, ‘위대한 사회’와 같은 반자유적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하는 그들의 입장은 (미국식) 자유주의 정신(American liberalism) 또는 ‘리버럴’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원래의 (소극적)자유주의와는 반대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구별짓기 위해 원래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⁴ 이들도 계몽주의 사상을 수용하지만, 반종교적이며, 이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지녔다. 베를린에 따르면, 계몽주의와 이성주의 융합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겔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특히 루소의 영향력은 프랑스 혁명이 적극적 자유의 정신을 반영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⁵ 하이에크가 이들 이념이 같은 뿌리를 가진다고 본 것(Hayek, F.A., ‘The road to serf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4 도 같은 맥락이다.

liberalism) 또는 리버타리아니즘(libertarianism)⁶으로 불리우고 있다.

우리는 자유주의 이념의 산물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자유의 개념조차 생소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행운이 가져다 준 결과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십수 년 전 좌파정권이 등장한 이후, 일부 정치세력이 극단적인 반자유체제이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비호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다. 그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사회의 다양성 보호라는 명분으로 반자유 이념의 확산하는 정치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성직자, 학자, 예술가와 그 동조자들은 최근 북한을 추종하는 반체제 정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위배한다는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내린 정당해산과 의원직 박탈이라는 판정을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규탄하고 있다. 또한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 우리 법원에게 통합진보당의 활동의 보호를 촉구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이는 모두 진정한 자유주의 정신을 오해하거나 왜곡시키려 한 데서 나왔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족주의나 민중주의를 뜻하며, 그들이 내세우는 언론과 결사의 자유는 자유주의의 산물이지만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들은 자유주의의 소극성이 자유를 위협하는 자유를 용인할 거라고 오해하지만, 자유주의는, 미국의 독립전쟁, 20세기의 전체주의에 대한 전쟁, 독일의 공산당 해산결정의 사례들⁷이 보여주듯이, 그런 위협을 힘으로 제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의 최대 화두였던 양극화 논쟁, 동반성장론, 반기업이나 반시장 정서, 그리고 이를 반영한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 정책들 역시 반자유적 성향을 드러낸다. 최근에 한국사회를 들끓게 만든 샌들의 정의론, 피켓티의 신자본주의 열풍도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들이 자유주의자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자본주의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민주주의,

⁶ 이를 자유지상주의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유맹신 또는 극단적 자유지상주의(libertine)의 의미에 가까우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⁷ 독일 연방재판소는 사회주의제국당(1952), 독일공산당(1956)의 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비슷한 최근의 사례로 터키(1998)와 스페인(2004)에서도 당 해산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식) 리버럴리즘과 같은 이념성향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적극적 자유주의의 또 다른 파생품이다. 주목할 사실은 한국의 이런 경향이, 미국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불황의 여파로 대두되었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배정의 실현이라는 성격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경제불황이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간섭 때문에 악화된 경우가 많았음에도, 주로 자본주의의 탓으로 매도되었다.

자유주의의 경제적 형태, 즉 경제적 자유주의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자본주의는 인류에게 번영과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성향과 분배정의에 대한 요구를 강화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주된 이유는, 논의의 확대를 피하기 위해 주제를 한정한다면, 자본주의와 불평등의 뿔 수 없는 관계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불균등하게 분포된 개인의 처지와 창의력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하기에, 불평등한 결과는 불가피하다. 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회균등의 보장과 자발적 협조를 통해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결과의 평등을 얻는 것이다.

전자가 소극적 자유의 정신에 따른 방안이라면, 후자는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데서 나온다. 전자는 개인적 자유와 영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절제된 방안이다. 후자는 평등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라는 현실적 강제수단에 의존한다. 전자는 균등한 분배가 사회적 화합의 필수조건이 아니며, 자유의 보호가 불평등의 완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사회적 갈등은 분배정의에 의해서만 해소되며, 이를 위해 개인적 자유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두 방안의 상대적 우월성을 논증하기는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역사적 경험은 자유의 보호가 번영과 화합에 기여한 반면, 정부실패가 자유를 훼손하고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밀턴 프리드먼은 이를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두 가지 모두를 얻지 못한다. 평등보다는 자유를 우선시 하는 사회는 두 가지 모두를 높은 수준으로 얻는다’⁸라고 명쾌하게 지적하였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의 정신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번영과 화합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힘을 사용해서라도 그런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개념임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의 힘은 긍정적이고

⁸Friedman, M.,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절제된 힘이다. 자유주의가 도입된 역사가 짧은 한국사회는 자유의 정신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고, 민족사회주의, 정부개입주의와 같은 적극적 자유의 개념에 보다 친근한 경향을 드러낸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정체는 이처럼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친 단순화라는 위험이 허용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자유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한국적 계몽주의(Korean enlightenment)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